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 차>

1. 투자자 의사 통지방식 개선
2.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예외적인 신용공여 기준 명확화
3.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부과 및 중복배정 규제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기준
5.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근거 마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류성재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정각		연락처	02-2100-2652
	과장	변제호		이 메 일	dapasj@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투자자 의사 통지방식 개선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3.11.~2021.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계약서류 수령 거부 등을 위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으로 서면만 허용→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에 전화·팩스·전자우편을 추가하여 투자자 편익 제고		
	7.규제내용	○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계약서류 수령 거부 등을 위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에 전화·팩스·전자우편을 추가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증권회사 ○ (이해관계자) 투자자		
	9.규제목표	○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추가하여 투자자 편익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u>서면</u> 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
1. ~ 18. (생략) 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8. (현행과 같음) 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 ----- ----- -----.
1. (생략)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 <u>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3. ----- ----- <u>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u>

<p>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p> <p>4.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u>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p> <p>-----</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 의사, 계약서류 수령 거부 등을 위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으로 서면만을 허용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

○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으로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추가

※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7월) 발표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투자자 의사 통지방식 개선
	내용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계약서류 수령 거부 등을 위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에 전화·팩스·전자우편을 추가함으로써, 이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의사표시 허용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으로 서면만 허용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
- 2) 규제대안1 :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계약서류 수령 거부 등을 위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에 전화·팩스·전자우편을 추가하여 투자자의 편익 제고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 3. 규제목표

☐ 투자자 의사 통지방식을 추가하여 투자자 편의 제고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투자자 의사표시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없음

####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경과

- ☐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음

#### 2. 향후 계획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할 계획

#### 3. 종합결론

- ☐ 투자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투자자 편익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규제적 성격없음)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예외적인 신용공여 기준 명확화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3.11.~2021.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근거가 법률에 반영 → 법체계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非종투사의 신용공여 관련 사항도 기존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		
	7.규제내용	○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를 자법인·손자법인으로 시행령에서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증권회사 ○ (이해관계자) 증권회사		
	9.규제목표	○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법인 범위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보다 명확히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생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원을 말한다.</u> <u>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을 말한다.</u> <u>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u> <u>----- 하나의 경우가</u> <u>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u>
<u>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u>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u>	<u>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u>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  
용공여

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를 하는 경우

나.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  
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  
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  
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  
하는 경우. 다만, 금융투자업  
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  
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  
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  
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  
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는 일반 금융투자업자(非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예외적인 신용공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기존 시행령 상의 내용들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임규정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근거가 법률에 반영되는 만큼, 非종투사 관련 사항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예외적인 신용공여 기준 명확화
	내용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 법인의 범위를 자법인·손자법인으로 시행령에서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 법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소지
- 2) 규제대안1 :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 법인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법체계상 정합성 제고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 3. 규제목표

- ☐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법인 범위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보다 명확히 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단순 상향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 2. 향후 계획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할 계획

## 3. 종합결론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면서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관련 내용도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 체계의 정합성 고려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부과 및 중복배정 규제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의2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3.11.~2021.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O 과정에서 일반 청약자들의 참여요구가 증가중인 반면,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공모주가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기회 제한 →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중복청약 제한 필요</li> </ul>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로 하여금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중복청약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li> </ul>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집단) 증권회사</li> <li>○ (이해관계자) 증권금융회사, 중복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li> </ul>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로 하여금 중복청약을 확인, 중복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확대</li> </ul>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12.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략) <u>&lt;신설&gt;</u>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거나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당 주권을 배정받고자 하는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청약자가 2개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행위 나. 가목에 따라 청약자가 중복청약하였음을 확인했음에도 청약자에게 중복배정(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청약한 청약자에게 주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행위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IPO 공모주 관련하여 증권사별 고객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려 하는 유인이 있는 반면,
  -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고, 중복청약을 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하지 않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 투자자들의 IPO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IPO 공모주를 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청약자에게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자가 노력할 필요

※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20.11월) 발표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증권회사의 중복청약 확인의무 부과 및 중복배정 규제
	내용	증권회사로 하여금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중복청약을 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을 하지 않도록 함

#####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2) **규제대안1** : 증권회사로 하여금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중복청약을 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을 하지 않도록 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투자협회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IPO 공모주를 배정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	-

## 3. 규제목표

- ☐ 증권회사로 하여금 중복청약을 확인하고, 중복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기회를 부여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일반 청약자에 대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여 적발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 수많은 일반 청약자에 대해 행위 규제를 적용하게 되어, 다수의 중복청약자를 범법자로 취급할 가능성 존재
- ☐ 이를 감안하여 준법감시인 등의 조직을 통해 관련 규제 준수 능력이 충분한 증권회사로 하여금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고, 중복배정을 하지 않을 의무 부과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동 규제는 증권회사에 대해 중복청약 확인 및 중복배정 배제 의무 부과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홍콩의 '상장규정 실무노트'에 따르면 일반청약 트랑쉐를 청약금액에 따라 A폴, B폴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폴에 대한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있음

< 홍콩의 공모주 배정 방법 >

구 분		배 정
투 자 자	기관	임의배정 트랑쉐(placing tranche)
	일반	일반청약 트랑쉐(public subscription tranche)
		10% 이상 배정 (A폴 : 500만홍콩달러 이하, B폴 : 500만홍콩달러 이상) ※ 복수 폴에 대한 청약 불가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회사, 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설치될 예정인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통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관련하여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20.11월)]

#### 2. 향후 계획

- ☐ 향후 증권금융 내에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3. 종합결론

- ☐ 일반 청약자에게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5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9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3.11.~2021.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 동 신용공여 기준 및 한도에 대해 시행령 위임		
	7.규제내용	○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기준 및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이해관계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9.규제목표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유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 ⑤ (생략) <u>&lt;신설&gt;</u>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제38조제3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을 말한다.</u>
<u>&lt;신설&gt;</u>	<u>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해외 현지법인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해외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신용공여 한도를 말한다.</u>
<u>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⑧ ----- 제7항까지-----</u> ----- -----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舊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증권회사와는 달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됨
  -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의 보다 높은 조달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담이 크고 일반 증권회사와의 형평성도 문제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자본시장법(‘20.12월, 이용우 의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마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孫子法人”으로 규정</li><li>○ 신용공여 한도를 전체 현지법인 기준 자기자본의 40%, 동일 현지법인 기준 자기자본의 10%로 규정</li></ul>

#####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방안
  -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의 내용과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현행 유지안은 채택 불가
- 2) **규제대안1**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손자법인으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의견조회 결과, 동 규제수준이면 준수하는데 큰 부담은 없음	-

## 3. 규제목표

-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을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확보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법에서 위임하고 위임 범위 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에 따라 이행에 무리가 없는 만큼,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유사 입법사례

### ○ 非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회사와의 비교

- 非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현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손자법인’으로 규정 → 동일한 규제 수준 유지

### ○ 타 업권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한도 관련

- 은행의 경우 전체 자회사 기준 자기자본의 20%, 동일 자회사 기준 자기자본의 10% 규제 적용중 → 종투사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

## III.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 2. 향후 계획

- ☐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

### 3. 종합결론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가운데, 동 사업자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근거 마련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제7항 및 제10항제2호의2		
	3.위임법령	-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3.11.~2021.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O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중복청약 확인의무를 새롭게 도입 → 중복청약 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청약정보 및 개인정보 취급 필요</li> </ul>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는 일반 청약자의 청약내역 및 암호화된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별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 후 증권회사에 중복청약 여부를 통지</li> </ul>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집단)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li> <li>○ (이해관계자) 청약 투자자</li> </ul>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로 하여금 중복청약을 확인, 중복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확대</li> </ul>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생략)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증권금융회사는 <u>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u>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 <u>다음 각 호의</u> ----- ----- ----- ----- -----.
<u>&lt;신설&gt;</u>	1. <u>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u>
<u>&lt;신설&gt;</u>	2. <u>제68조제5항제4호의2 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u>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⑩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2의2. <u>제68조제5항제4호의2 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⑪ ~ ⑰ (생략)	⑪ ~ ⑰ (현행과 같음)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IPO 공모주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는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투자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고, 중복청약을 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하지 않을 의무를 새롭게 도입

※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20.11월) 발표

-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별 청약정보를 확인 및 대사하는 절차가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근거 마련
	내용	증권회사는 일반 청약자의 청약내역 및 암호화된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별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 후 증권회사에 중복청약 여부를 통지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증권금융회사가 실명번호 없이 중복청약 대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인 검증이 불가능하여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2) 규제대안1 :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투자자 실명번호를 수령하는 경우 동일인 검증이 가능하여 중복청약 여부 확인 가능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 3. 규제목표

- ☐ 중복청약 확인을 위해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가 암호화된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여, 중복청약 확인에 대한 실효성 제고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중복청약 확인을 위해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가 암호화된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활용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동 규제는 중복청약 확인을 위해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없음

####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III.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관련하여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20.11월)]



## 2. 향후 계획

- ☐ 향후 증권금융 내에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3. 종합결론

- ☐ 일반 청약자에게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을 금지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